

한반도 긴장 증폭 노리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한반도 긴장을
몰고오는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

3면

레닌의
《사회주의와 전쟁》
전쟁에 대처하는
사회주의자의 방침

2면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

4~5면

이집트
군부 정권은
성소수자 탄압
중단하라

6면

독립 염원을
저버린
카탈루냐
자치정부

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카탈루냐 독립 시도로
드러난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취약성

7면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8면

레닌의 《사회주의와 전쟁》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전술은 무엇인가?

차승일

점증하는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긴장 고조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알아야 한다.(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동아시아 상황에 적용한 김하영,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레프트21> 96호를 꼭 읽어 보시오.)

레닌이 쓴 《사회주의와 전쟁》은 “전쟁과 관련한 사회민주주의의 전술을 개괄”할 목적으로 쓰인 소책자다. 전쟁에 맞선 투쟁을 어떤 전략과 전망 하에서 건설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 큰 영감을 준다. 특히 현재 국내 좌파의 일각에서 평화주의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평화주의를 철저하게 비판한 《사회주의와 전쟁》은 읽을 가치가 있다.

레닌은 《사회주의와 전쟁》을 1915년 8월에 출판했다. 1915년 9월 스위스 치머발트에서 열린 국제반전 회의를 겨냥한 것이었다. 치머발트 회의에 참석한 국제 사회주의 정당의 대표는 39명밖에 안 됐지만,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914년 7월 제1차세계대전이 개전하자 국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그전의 다짐을 저버리고 각자 자국의 전쟁 노력과 승리를 지지했다. 당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대표격이었던 독일 사민당도 애국주의 부추기기에 동참할 정도였다.

그러나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면서, 1915년 여름에는 대중 정서가 바뀌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 주류의 전쟁 지지 입장(사회적 애국주의)과 단절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치머발트 회의는 그 흐름을 표현한 사건으로 “일보 전진”이었다.

레닌은 치머발트 회의를 지지하며 참석했다. 치머발트 회의 다수파가 제출한 평화주의적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다.

그러나 동시에 레닌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입각해 작성한 독자 결의안을 제출했다.(이는 부결됐다.) 또, 회의가 채택한 결의문을 혹독하게 공개 비판했다. 그 결의문이 담고 있던 평화주의는 사회적 애국주의와 명확하게 단절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평화주의는 대중의 소박한 평화 염원 정서에 기반한다. 레닌은 대중의 그런 정서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운동의 전략으로서 평화주의는 비판했다. 다음의 인용문은 레닌의 기본 관점을 잘 보여 준다.

“평화를 바라는 대중의 염원은 흔히 저항의 시작, 전쟁의 반동적 성격에 대한 분노와 자각을 드러낸다. … 사회민주주의자[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는 그런 정서가 추동하는 모든 시위에 가장 열렬한 일부로 참가할 것이다. 그러나 병합 없는 평화, 민족 억압 없는 평화, 약탈 없는 평화, 현 정부들과 지배계급들이 벌일 새로운 전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왼쪽 팻말) 독일 해군 병사들이 일으킨 반란은 독일 전역으로 번져 제1차세계대전을 끝내고 혁명으로 이어졌다

쟁의 씨앗이 없는 평화가 혁명적 운동 없이도 가능하다는 관념으로 대중을 기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 항구적이고 민주적인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정부와 부르주아지에 맞서는 내전을 지지해야 한다.”(이하 인용은 필자가 영어판본을 직접 번역한 것이다.)

평화주의는 전쟁 일체에 반대한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각각의 전쟁을(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비록 전쟁이 모두 공포, 잔혹 행위, 비탄, 고통을 불가피하게 수반할지라도, 대단히 해악적이고 반동적인 제도(전쟁제이나 봉건제)를 파괴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유익한 진보적인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1861년 일어난 미국 남북전쟁 등이 당시의 사례다.

‘정당하고 방어적인’

레닌은 마찬가지로 이유로 피억압 민족이 강대국에 맞서 일으키는 전쟁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내일 모로코가 프랑스에, 인도가 영국에, 페르시아나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한다면, 그런 전쟁은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와 무관하게 ‘정당하고 방어적인’ 전쟁일 것이다. 사회주의

자는 모두 억압당하고 종속돼 있고 불평등한 처지의 국가가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를 소유하고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강대국들에 맞서 승리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벌이는 제국주의적 전쟁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으므로 그 자체를 지지할 수도, 그중 한 국가를 편들 수도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노예 100명을 소유한 노예 소유주가 노예 200명을 소유한 노예 소유주에 대해 ‘공정한’ 노예 재분배를 요구하며 전쟁을 벌인다고 상상해 보라. 이런 사례에 ‘방어적’ 전쟁이나 ‘조국 방위’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역사적으로 오류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약삭빠른 노예 소유주가 평범하고 속물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순전한 기만일 뿐이다.”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쟁은 단지 물지각한 지배자 일부가 일으키는 잠깐의 일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현상이라고 봤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집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전쟁과 한 나라 내의 계급 투쟁이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음을 이해한다는 면에서 평화주의와 …

다르다. 계급이 폐지되고 사회주의가 건설되지 않는 한 전쟁이 없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피억압 계급이 억압 계급에 맞서 벌이는 전쟁, 노예가 노예 소유주에 맞서 벌이는 전쟁, 농노가 지주에 맞서 벌이는 전쟁, 임금노동자가 부르주아지에 맞서 벌이는 전쟁 같은 내전을 정당하고 진보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는 면에서도 다르다.”

제1차세계대전은 극심한 사회적 위기를 불렀다. 또, 전쟁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그 전쟁으로 노동계급은 고통만 받을 뿐 이로운 것이 없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사회주의자는 이를 이용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키려 애써야 한다는 것이 레닌의 결론이었다(혁명적 패배주의).

이와 달리 “교전국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야 한다는 생각을 ‘어처구니없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평화주의의 관점은 사실은 “정부들이 시작한 전쟁은 정부들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야만 한다”는 자본가 계급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레닌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레닌의 주장이 옳았음은 현실에서 입증됐다. 제1차세계대전은 결정적으로는, 1917년 혁명의 결과로 들어섰지만 전쟁을 지속하는 등 개혁을 지체시킨 러시아 임시정부를 타도한 10월 혁명, 자살적 작전에 투입되기를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킨 해군 병사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1918년 독일 혁명으로 끝이 났다.(김종환, ‘제1차세계대전 종전: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다’, <노동자 연대> 167호를 참고하시오.)

물론 레닌 시절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똑같지는 않다. 당시와 달리 현재 강대국들은 식민지 정탈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레닌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레닌은 사회주의자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

주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이 이런 [혁명적] 정서를 의식하도록, 그 의식을 심화시키도록, 그 의식을 분명히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 임무는 다음의 구호로만 정확히 표현될 수 있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켜라. 전시에도 거둬거둬 벌여질 모든 계급 투쟁, 만만찮게 일어날 ‘대중 행동’의 모든 전술은 이 구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강력한 혁명 운동이 불타오를 때가 강대국들이 벌이는 제국주의 전쟁의 첫 번째 전쟁 때일지 두 번째 전쟁 때일지, 그 전쟁들의 와중일지 후일지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짊어진 임무는 이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활동하는 것이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

★ 오스트리아 총선 중도우파의 인종차별 부추기기가 나치의 성장을 복돋다

★ 아일랜드 낙태 금지 헌법 조항 폐지 투쟁이 본격화하다

★ 미얀마 로힝야족의 비극에 시큰둥한 미·중 제국주의의 위선

★ 문재인 정부의 젠더폭력 대책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 요원 특혜 진상을 밝혀라

★ 토론회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한반도로 (긴장 몰고) 오는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

김영익

긴 추석 연휴로 많은 한국인들이 쉬고 있을 때, 트럼프의 입과 트위터 계정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고 글을 올릴 때마다 한반도 상황이 출렁거렸다.

최근 대북 정책을 비롯한 여러 대외 정책을 놓고 미국 국가의 최상층 내에서 이견과 혼선이 불거지는 게 두드러진다. 트럼프가 국무장관 틸러슨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9월 30일 틸러슨은 중국 방문 중에 “우리는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틸러슨이 협상을 시도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무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항간에는 틸러슨이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자 최근 트럼프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아이큐(IQ)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란 핵합의, 자유무역협정 등 여러 대외 정책을 놓고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불협화음이 커지는 와중에 불거졌다. 북핵 문제도 그중 하나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정부는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동해

지난해 대선 기간에 트럼프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난했고,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래서 한때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집권 후 해외 군사 개입을 강화해 왔다.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폭격을 단행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증파를 결정하는 등 그는 중동 지역에서 전임 오바마 정부 못지않게 군사 행동을 벌였다. 트럼프 정부는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정부 중 내각과 백악관에 군장성 출신이 가장 많이 포진된 정부다. 또한 트럼프는 해외 군사 개입이 국내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

북핵 문제에서도 트럼프는 “전략적 인내”를 표방한 오바마보다 훨씬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 게다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핵 문제의 판돈이 전보다 더 커져 버렸다.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보다 북한 핵무기 강화가 다른 국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것일 테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로서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보여 주면서 미국 핵무기의 세계적 우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10월 6일 트럼프는 군 수뇌부를 부른 자리에서 지금이 “폭풍 전 고요”라고 말했다. 다분히 북한을 겨냥한 말이었고,

해석하기에 따라 군사 행동을 예고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었다.

물론 트럼프가 당장 대북 선제 타격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서울은 물론이고 14만 명이 넘는 주한 미국인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선제 타격이 아니라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은 있다. 트럼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그런 군사적 조치들을 감행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 같다. 예컨대 전략폭격기에 이어, 미군 항공모함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상해 무력 시위를 벌일 수 있다. 1968년 푸에블로 호 사건 당시 미국이 항모를 원산 앞바다로 들여보낸 적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연이어 한반도에서 전략폭격기로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핵추진 항공모함 노널드 레이건함이 동해로 이동 중이다. 또한 다른 핵항모도 미국 서부 해안에서 한반도 인근으로 오고 있다. 이미 7일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경남 진해항에 입항했다. 미국은 앞으로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군사력 전진배치는 북한을 크게 긴장시킬 행위다.

이렇게 트럼프가 제국주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북한을 향한 협박을 계속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북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며 더 많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려 할 것이고, 향후에 그런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거래의 기술

트럼프는 지금 북한을 상대로 “거래의 기술”을 발휘하려는지 모른다. 즉, 염포를 놓으며 위기를 조성한 다음 유리한 조건에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그의 사업 수완 말이다. 그러나 그의 “거래의 기술”이 한반도에서는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우선, 트럼프의 대북 압박은 그가 가장 중시하는 중국과의 경쟁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의 최측근 스티븐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서 물러났어도 여전히 트럼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트럼프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이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도 지난 30년 동안 정권 생존을 위한 싸움에 익숙해져 있다. 트럼프가 공공연히 북한 정권 교체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순순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공세 때문에 한반도는 21세기 들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이 선정된 것은 이런 정세가 반영된 일일 것이다.

11월 초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의 방문을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미국의 “도발” 한반도 인근에 항모전단들을 전개하는 것은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미국의 핵우산은 불안정을 높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우익은 미국의 핵우산부터 확인하려 든다.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게 되면, 미국이 시애틀을 희생하면서까지 서울을 방어해 주겠냐며 신경질적으로 걱정하면서 말이다. 우익이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집착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핵우산을 중시하는 면에서는 우익과 그다지 다를 게 없다. 9월 27일 대통령 문재인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한 후에 나온 공동 발표문은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미군 핵무기까지 동원한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이기도 하다. 이런 발표문에 정의당 지도부가 동의해 준 것은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조국방어론’의 전조처럼 보여 문제적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의 도발을 견제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중국이 개입하자 핵무기 공격을 심각하게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맥아더는 핵폭탄 30~50개를 한꺼번에 투하해 방산능 오염으로 한반도를 만주와 분리시키자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미군은 모의 핵폭격 훈련도 실시했다.

정전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어기고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들였다. 주로 소련·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였지만, 북한도 미국 핵무기의 공격 대상이었다. 한때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1천기에 육박할 정도였다. 미국 핵무기는 냉전이 끝나고야 비로소 한국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북한은 냉전 해체 이후에도 미국의 핵 공격 대상에서 빠진 적이 없고, 미군은 한국에서 핵전쟁 연습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냉전 하에서 미국 핵무기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제대로 억제해 주지 못했다. 한반도는 냉전 때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이었고, 이 때문에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등 여러 차례 전쟁 위기가 벌어졌다. 그때마다 미국

은 북한 핵 공격 계획을 검토했다.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 데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한몫했다.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데다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이 지속되자, 북한 지배 관료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핵무기가 없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2003년 미군 침공으로 붕괴되는 것을 보며, 북한 지배자들은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더 절감했던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지만, 국가간 갈등 면에서는 미국 제국주의의 압박이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가 강화될수록 북한도 핵무기를 더욱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한반도의 불안정도 항구적으로 해소될 수가 없다.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건, 한반도를 제국주의 간 갈등 속으로 더욱더 깊이 밀어 넣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미군 전술핵이 다시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정 자극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 내 미군 전술핵 배치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게 뻔하다.

확대되고 있는 이집트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

이집트 정권은 성소수자 속죄양 삼기 중단하라

박이량 노동자연대 회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아랍어 전공생

이집트 엘시시 정권이 성소수자 마녀사냥을 확대하고 있다. 이집트의 인권단체 '인권을 위한 이집트 이니셔티브'(EIPR)는 9월 22일 '무지개 깃발 사건' 이후 현재까지 보안당국의 단속으로 57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2일 이집트 정권은 카이로에서 열린 레바논 출신 유명 밴드의 콘서트에서 성소수자의 자금심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든 참가자 7명을 체포했다. 이 밴드의 리드 보컬은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이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223호에 실린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 진정한 범죄자는 무지개 깃발을 흔든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한 자들이다!'를 참고하시오.)

이처럼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성소수자를 방어하는 목소리가 이집트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아랍인들이 죄다 동성에 혐오적이라는 주장이 편견임을 보여 준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과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인종적 편견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 왔다.

이집트 당국이 연행된 성소수자들에게 씌운 혐의는 이들이 "문란"하고 "성적 일탈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동성에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상 범죄시되고 있다. 연행된 성소수자들은 속전속결로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 불과 며칠 만에 10명이 1년에서 최대 6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연행자 중 5명은 강제로 항문 검사까지 받았다. 변호사에 따르면, 보안당



이집트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 규모는 2001년 이래 최대다. 9월 22일 콘서트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참가자

국은 다른 수감자들을 부추겨 연행된 여성 성소수자를 구타하고 추행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이집트 당국은 SNS, 채팅 어플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범한 성소수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10월 8일에는 페이스북에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던 활동가가 체포됐다.

최근 성소수자 탄압의 규모는 2001년에 독재자 무바라크 정권이 나일강에서 선상 파티를 열던 남성 52명을 연행했던 사건 이래로 역대 최대다. 2013년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군부 정권이 성소수자 관련 혐의로 체포한 사람의 수는 2017년 3월까지(EIPR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232명이다.

엘시시 정권은 성소수자 마녀사냥

을 통해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 이는 엘시시 정권이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엘시시 정권이 처한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주요 수입원이던 관광업과 수에즈운하의 수입이 하락하면서 이집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엘시시 정권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면서,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도 향후 3년에 걸쳐 차관 13조 4000억 원을 도입하려 한다. 현재 이집트의 국가부채는 353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이집트의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는 것이다.

엘시시는 IMF 차관을 받는 대가로

초긴축 정책에 서명했다. 과거 이집트 군부 정권들이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제공해 온 연료·전기·식료품 보조금 등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휘발유와 등유 값, 지하철 요금 등이 두 배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엘시시는 리비아와 시리아반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역대 영향력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집트는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미국의 해외 군사 원조를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받는다.

이런 조치들은 이집트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엘시시 정권이 재정 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홍해의 요충지 섬 두 개를 양도하자, 수년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져 나왔다. 8월에는 마할라 지역

섬유 노동자 1만 6000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주간 파업을 벌여 엘시시 정권의 위기감을 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엘시시 정권은 탄압을 부쩍 강화해 왔다. 6월경엔 반정부 활동가들이 잇따라 연행되고 권력 재판으로 10년 형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214호에 실린 '이집트 — 최근 부쩍 강화된 정치 탄압은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를 참고하시오.)

엘시시 정권은 동시에 보수적인 일부 종교 세력을 이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한다. 일부 무슬림 사원은 반동성에 집회를 조직하고, 이집트 내의 소수 종교인 콥트교회는 동성애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학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위기에 직면한 이집트 정권이 성소수자를 속죄양 삼아 자신들의 취악함을 감추고 정권을 공고화하려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인 이집트가 자국 내 성소수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일부 성소수자 단체 지원은 그들의 제국주의적 악행을 가리고 세탁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다("핑크 워싱").

이집트 엘시시 정권은 성소수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체포된 이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이집트 민중이 정권의 분열 시도에 맞서 단결하고 탄압을 이겨 내 억압과 차별, 착취가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성소수자가 공 차면 “미풍양속” 위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성소수자 행사 취소 조치

10월 21일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주최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갑작스러운 대관 취소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됐다.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서 여성 성소수자들은 배드민턴, 풋살, 계주 등을 할 예정이었다. 대관비 마련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있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취소 이유로 누수로 인한 천장 공사를 들었다. 그러나 취소 하루 전날 대관 담당자는 이 행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반대액선으로 인한 안전관리상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성소수자 행사라서 대관이 취소된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우리가 공 차면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것이냐?” 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공공시설 사용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퀴어퍼레이드 조직위원회는 개최 장소 문제로 해마다 관할 관공서와 싸우고 있다. 올해 부산 해운대에서 처음 열린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이 장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해서 행사 당일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2015년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수련관 대관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차별 행위'라는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얼마나 불철저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대관 담당자는 이번 취소 결정에 “동대문구청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그는 동성에 혐오로 유명한 이태희 목사(동대문구 성북교회)의 '부흥성역 4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도 참가해 축하와 격려를 한 바도 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10월 18일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에 분노하는 2017 여성성소수자 퀴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성소수자 차별 결정에 항의하자.

성지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할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염원을 저버리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데이브 수엘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대화”가 우선이라며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염원을 배신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10일 밤 푸지데몬은 카탈루냐 자치정부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책임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우선해 ... 독립 선언 발효[절차]를 중단한다”

스페인 경찰의 탄압에도 독립 찬반 국민투표가 강행된 10월 1일 이전, 푸지데몬은 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으면 48시간 안에 독립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투표자의 약 90퍼센트가 독립에 찬성했다. 그러나 푸지데몬은 약속한 48시간에서 1주일이 더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푸지데몬은 이렇게 말했다. “독립이 가결됐으니 나는 결과를 따를 것이다.” 참 오래도 걸렸다. 그런데 푸지데몬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선 대화부터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목표를 달성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파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의 스페인 중앙정부는 대화에 전혀 관



10월 3일 독립을 바라며 카탈루냐 총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

심이 없고, 오직 탄압과 협박으로 대응해 왔다.

푸지데몬은 정치인과 언론이 “진정”해야 하고 지금의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독립 운동이 심화하면서] 본사를 카탈루냐 밖으로 이전한 기업들에게 카탈루냐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푸지데몬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사태의 주도권을 라호이에 도로 넘겨 줄 뿐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의사당 밖 공원에 모여 푸지데몬의 연설을 대형 스크린으로 시청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과 불신을 감추지 못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분리독립을 지지한 반자본주의 정당 민중연합(CUP) 대열에서 노성이 터져 나왔다. “부끄러운 줄 알라!” 민중연합 대열은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민중연합은 캐

스팅 보트를 쥐고 푸지데몬 자치정부가 유지되도록 지지하고 있다.)

사태를 좀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푸지데몬이 일방으로 독립을 선포하는 위협을 무릅쓰리라고 여차피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페인 국왕 없는 첫 날이 밝은 듯하다.”

분리독립 투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푸지데몬의 10일 연설은 중대한 후퇴였다.

이런 후퇴에 유럽연합(EU) 고위 정치인들이 거간꾼 노릇을 했을 수 있다.

10일 푸지데몬은 의회 연설 시각을 한 시간 이상 늦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 등과 논의한 후 연설하려는 목적에서였다고 한다.

그에 앞서 EU이사회 상임의장 도널드 터스크는 한 연설에서 “양측의 주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한 다면서, 푸지데몬에게 대화를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카탈루냐 독립의 우군이 아니다. 이미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총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을 표하며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은 “스페인 내부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 고위직 인사들이 이런 입장에 공감했다.

그들은 브렉시트 때문에 이미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유럽 질서가 또 한번 타격을 입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일부는 카탈루냐 독립이 자국내 독립 운동 염원에 불을 댕길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분리독립 요구 시위 대열에는 카탈루냐 깃발이 많았고 붉은 깃발도 조금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역 치안위원회 현수막도 나부꼈다. [중앙정부의 탄압에 맞서] 분리독립 찬반 국민투표를 성사시키려 수립된 이들 지역 치안위원회는 국민투표 이후에는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총파업을 조직했다.

푸지데몬의 후퇴는, 카탈루냐의 민주주의와 독립을 쟁취하는 데서 지역 치안위원회의 현수막이 상징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짊어진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5호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카탈루냐 독립 갈등으로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취약성이 드러나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유럽연합(EU)을 지탱하려는 지배자들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적한다.

“치안수비대 입대는 내란 선포 행위다.” 스페인 내전이 벌어진 1936년에 스페인 소설가 라몬 센데르는 이렇게 썼다. [당시] 준 군사조직이었던 치안수비대는 부패한 부르봉 왕가가 19세기에 창설한 억압 기구였다. [치안수비대의 상징인] 삼각모자와 더불어 치안수비대는, 내전에서 승리한 후 1939년에서 1975년까지 스페인을 지배한 프란치스코 프랑코 독재 정권의 상징이 됐다.

10월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중단시키려 치안수비대를 파견한 스페인 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치안수비대의 상징성을 몰랐을 리 없다. 어쨌든 라호이가 속한 국민당은 프랑코 내각에서 장관이었던 마누엘 프라가가 설립한 정당인 것이다.

물론 국민당 지지자들은 국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며 약탈한 프랑코 독재와는 아무 연관도 없다고 성마르게 주장할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진실에 부합한다. 국민당은 [프랑코 독재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8~19세기 부르봉 왕가 치하에 뿌리내린 카스티야* 중심주의를 옹호

한다. 이 카스티야 중심주의에는 카스티야에서 비롯하지 않은 지역, 특히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자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전 세기에 횡행했던] 이런 억압이 20세기 초에 마드리드에 다시 만연했다. 카탈루냐와 바스크는 [스페인 다른 지방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점 자치권 내지는 독립을 요구하게 됐다. 이는 스페인 국가의 이미 심각한 위기를 악화시켰고, 결국 내전이 발발했다. 프랑코는 바스크와 카탈루냐의 민족주의를 특히 혹심하게 탄압했다.

최근 카탈루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현대 스페인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1978년 헌법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 1978년 헌법은 “스페인 국가의 불가분의 통합”과 “민족·지역 구성원들의 자치권”을 모두 긍정하는, 매우 모순적인 법이

다. 이 헌법은, 한편으로는 프랑코주의와 (합의 하에) 결별하면서도 스페인 국가와 스페인 자본주의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려 노력한 특정 상황에서 도출된 산물이었다.

이 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머리를 맞댔던 것은 세 부류의 매우 비민주적인 자들이었다. 첫째 부류는 프랑코주의 정치 운동을 현대적으로 고치려는 자들로 전 총리 아돌포 수아레스가 이들을 대변했다. 둘째 부류는 군부였으며, 셋째 부류는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좌파 정당이었던 스페인공산당이였다.

바스크와 카탈루냐의 민족주의 운동이 프랑코 독재에 맞서 격렬히 투쟁했기 때문에, [스페인 국가는] 이들 두 민족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해야만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을 포함한 온전한 영토를 수호”할 임무는 계속 군부에 맡겨졌다.

바스크 지방에서 [이 타협에 맞서] 오랫동안 게릴라 투쟁이 벌어졌음에도 이런 타협은 결국 굴어졌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의 중추적 국가가 됐다. 그러나 스페인과 유럽연합 정치인들이 [공히] 과시했던 스페인과 유럽의 [끈끈한] 연계가 외려 [유럽연합의] 패착이 될 수도 있다.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에서 경제적

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국민소득의 20퍼센트가 이곳에서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 친기업적으로 산업화·국제화돼 있다.” 그러나 스페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카탈루냐 역시 라호이가 집행한 혹독한 긴축 정책에 시달려 왔다. 라호이는 총리가 된 2011년 이래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침을 매우 충실히 이행해 왔다.

한편 [아당일 때부터] 라호이와 국민당은,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당이 이끌던 전 정부가 카탈루냐·바스크와 벌인 협상으로 더 많은 자치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맹렬히 반발해 왔다. 그래서 카탈루냐인들은, 긴축 정책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자결권은 인정하길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우파 정부와 계속 충돌해 왔다.

라호이에게는 유럽연합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라호이가 사회당과의 타협 속에서 소수 여당 총리 자리를 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프란츠 팀머만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중앙정부의] 진압 부대가 소위 “물리력을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팀머만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분명하다. 10월 6일 <파이낸셜타임스>가 불명했듯 “카탈루냐 위기는 유럽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다. ... 유로존의 국가 부채와 은행 위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유럽통합의 기틀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이 독립 요구로 압박하면 ... 온갖 문제들이 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라호이의 강패 전술은 벌써부터 역풍을 낳고 있다. 그리스 사태, 브렉시트에 이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은 부패한 신자유주의적 유럽 “질서”가 얼마나 취약하고 비민주적인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건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5호 / 번역 김준호

Q 용어설명

카스티야

1세기에 세워진 왕국의 이름으로, 카스티야 왕국은 오늘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포함하는 중부 지역에 존재했고 이후 다른 왕국을 통합해 스페인 통일을 주도했다. 18세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집권한 부르봉 왕가가 더욱 중앙집권화한 국가를 구축한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의회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카스티야 연안이 스페인의 공식 언어로 인정됐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현장, 더는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전용수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만 3번 째다. 이번 사고까지 치면 숨진 노동자가 12명이고, 부상자는 36명이나 된다.

지난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와 안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가 난 의정부 현장의 건설회사 측은 타워크레인 설치가 잘못돼, 해체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타워크레인 설치팀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색한 변명일 뿐이다. 설치된 순서의 역순의 방식을 제대로 지키면서 해체했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빨리 해체하려고 순서를 뒤바꾼 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다.

건설 현장의 관리자들은 입만 열면 ‘공기가 촉박하다, 적자다’ 하면서 ‘더 빨리’를 강요하고 있다. 안전을 말하고, 사람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자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사진:계현정 노동자

이윤 vs 생명 노동 안전은 체제의 이윤 물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한 다면서 2014년부터 ‘건설현장 근로감독관 전담 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의정부 타워크레인인은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실 제조연도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노후한 타워크레인이 만연해

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얘기는 지난 5월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매스컴에서 반짝 다뤄졌을 뿐 전수조사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담 너머로 보고 지났을까?

건설노동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다.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

이 되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건설 현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나라의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중시하는 후진적인 작업 방식으로 인해 피와 살점과 뼈를 도둑 당하고 영혼마저 사기 당하며 한 층 두 층 건물을 올려간다.

노동자가 수십 층 높이에서 구석진 곳으로 떨어져 죽었는데도 누가 없어졌는지도 모르다가 한 주가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되는가 하면, 넘어지고, 쪼

리고, 부러지고, 찢기고, 깔리며 죽어 나간 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운다.

수사와 보도와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조사도 원청이 말한 대로 끝나는 무지하고도 천박한 이윤체제다.

‘일이 있을 때 남보다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앞으로 건설현장은 줄어들 것이다’면서 말이다.

장래의 삶을 지탱하려면 좀 더 힘들고 좀 더 고달프더라도 좀 더 일을 해서 좀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라는 뜻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들 경쟁대상으로 여기며 우선 나만 살면 된다는 사장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야 함을 말한다.

홍물스런 사장들의 생각에 빠져들다 보면 친구, 동료, 형제, 가족마저도 경쟁의 대상이 돼,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 등으로 가하는 사장들의 공격에 대응 한 번 못한 채 삶을 도둑질 당할 것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임금을 올려라, 아픈 몸을 치료해 줘라, 전문 신기술 도입하라,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등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는 건설현장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이윤을 위해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는 적대적 경쟁체제를 폐지하고 자 하는 노력이 더해질 때 우리에게 희망의 숨결이 번져 나갈 것이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김문성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고, 국방부는 청와대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됐다. 또한 그 공작의 타격 대상에 이상돈 교수 같은 우파 지식인까지 포함될 정도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농단적이었음도 드러나고 있다.

26일에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확대를 추진하는 2012년 문서에 그 목표가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었음이 폭로됐다.

이는 국방부장관 김관진이 결재한 문서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실제로 이 시기에 요원이 늘었고 그 요원들은 일반적 절차와 달리 국방대학교가 아니라 기무부대에서 채용 후 교육을 이수했다.

27일에는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장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가 2014년에 수사를 받게 된 이태하가 당시(2014년) 사령관 옥도경에게 항변하는 통화 녹취록이 JTBC <뉴스룸>에서 폭로됐다. “장관이 시킨 거”,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

28일에는 여론 조작 공작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이 이명박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고, 그래서 최근 검찰이 김관진을 출국금지시켰다는 게 보도됐다(CBS <노컷뉴스>).

10월 9일에는 고려대가 박근혜 시절에 사이버사령부와 계약을 맺고 ‘댓글 공작’ 요원들이 포함된 사이버사 요원들을 위한 ‘무료’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학비는 국방부와 고려대가 절반씩 부담했다(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해당 대학원인 정보보호대학원은 올해 신규 과정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해당 과정이 중단됐다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의 심리전 요원 양성과 특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려대는 이명박 시절에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학부에도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했었다. 이 과를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이 가능했다. 김관진이 이 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적극 임용토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이 대학원의 전 원장이며, 사이버국방학과 신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교수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시절 대통령 안보특보를 지냈다.

※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친박 민간 댓글 부대로 활약한 이른바 십알단이나 일베 사이트, 어버이연합·엄마부대 같은 관변 단체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것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관여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우익 단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공급처가 국정원인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과 국방부가 주도한 “대남 심리전”은 핵심부부터 주변부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양상이었고, 당연히 이명박의 청와대의 지시와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작이 대선 개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당선했기

때문에, 그 작태와 기관들 간 정치공작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것도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콜라보”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콜라보”와 교차하는 것이다.

가령, 박근혜 시절,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할 때도 청와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일부 사실이 폭로됐다.

이런 공작들에서 드러난 사악함과 아비함에서 두 정권 사이의 경중을 가리기 힘들다. 오히려 연속성 면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 불릴 만도 하다. 이명박도 박근혜처럼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